고령화에 인지 능력 떨어져 '앗車하면 쾅'

노인교통사고 줄이자
〈1〉 급증하는 사고

광주·전남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
2016년 2527건→2018년 3011건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지자체·경찰 대책 실효성 없고
노인차량 스티커 배급도 효과 미미

18일 도로교통공단 전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광주·전남지역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이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65세 이상 운전 면허 소지자는 298만6000여명(2018년 기준)으로 전체 운전자의 9%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다. 광주도 2016년 6만1365명이던 65세 이상 운전자가 2년만인 2018년 7만4331명으로 21%나 급증하면서 덩달아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도 늘고 있다.

특히 노인 운전자 사고는 신체 고령화와 인지 능력 감퇴에 따른 운전미숙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일보는 3차례에 걸쳐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실태와 실효성 없는 현행 제도, 근본적인 안전 대책 등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정병훈(39·광주시 동구)씨는 최근 걱정이 하나 있다. 전남의 한 시골에 사시는 75세 아버지의 운전 때문이다. 정씨는 "아버지께 운전을 만류하면 아버지는 아직도 정정하다며 오히려 역정을 내신다"면서 "사시는 곳이 대중교통이 부족한 시골이고, 각종 농사에도 차량운행은 필수여서 무작정 운전을 막을 수도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광주시 북구에 사는 박진호(46)씨는 최근 아버지(73)와 합의하고 아버지의 승용차를 중고차 시장에 내다 팔았다.

더 이상 운전을 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차량을 없애는 대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을 찾은 끝에, 부모님의 주거지를 도시철도 1호선 역이 맞닿은 상무지구 모 아파트로 옮겼다. 박씨는 "아버지의 운전모습을 보면 불안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면서 "가족들이 운전을 그만하라고 해도 화만 내시더니, 결국 접촉사고를 두 차례나 내고서야 운전을 중단하셨다"고 말했다.

최근 고령화에 따른 65세 이상 면허소지자가 늘어나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자치단체와 경찰 등 관계기관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광주·전남지방경찰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최근 3년간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현황은 2016년 2527건, 2017년 2815건, 2018년 3011건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실제 지난 11일 오전 9시20분께 구례군 용방면 편도 1차선 도로에서 A(여·74)씨가 운행중이던 모닝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B(여·77)·C(여·80)씨가 숨졌다.

전날인 10일에는 오전 10시께 영광군 영광읍에서 D(83)씨가 운전하던 SUV 차량이 주택과 주유소 담벼락을 들이 받고 뒤집혀 D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노인 운전자로 인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노인교통사고는 고령화 시대와 맞물려 자신과 가족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의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자치단체들은 노인교통사고 대책은 국가에서 직접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그나마 자치단체 중에선 광주시 북구 등이 지난 2015년 고령운전자의 보호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르신 운전차량 인식스티커'를 발부한 것이 전부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도로교통공단이 전국 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인 실버스티커를 표준화한 '스마일 실버'를 개발·배포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부 선진국에선 노인전용 자동차 번호판을 의무화하는 등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운전자 보호 대책을 내놓고 있다.

도로교통안전기술협회 관계자는 "국내 일부 자치단체에서 배포한 노인 운전자임을 알리는 스티커만 하더라도 지자체마다 모양 등이 다르고 강제성도 없어 효과가 떨어진다"면서 "노인운전자 차량에는 실버운전자 스티커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노인 운전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법적으로 강제해 안전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흉가 체험' 방송하던 유튜버 진짜 시신 발견하고 '화들짝'

광주 폐쇄된 요양원서

흉가체험을 하던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자가 흉가에서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18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1인 인터넷 방송인(BJ) 박모(30)씨가 지난 16일 새벽 0시10분께 광주시 서구의 한 폐쇄된 요양원 2층에서 숨져 있는 A씨(67세 추정)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박씨는 인터넷방송으로 흉가체험 콘텐츠를 내보내기 위해 10여년간 방치된 요양원 철망을 넘어 내부로 들어갔으며, 각 입원실을 카메라로 비추던 중 쓰러져 있는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된 남성은 이미 사망해 신체 부위 일부가 부패한 상태였으며 주위에는 남성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불과 옷 등이 놓여 있었다.

출동한 경찰은 시신에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지갑 등이 함께 발견된 점으로 미뤄 타살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무시당했다며 노래방 업주 살해 50대 징역 15년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노래방 업주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5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단순히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박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회복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갈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새벽 2시 25분께 광주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16년부터 알고 지낸 피해 업주가 더 늦게 온 손님에게 방을 내주면서도 자신에게는 "방이 없으니 다음에 오라"고 하자 무시당했다고 여기고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는 인근의 다른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피해 업주의 노래방을 다시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기공사하던 외주업체 직원 추락 2개월만에 숨져

식료품 공장에서 전기공사를 하던 외주업체 직원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달여간 병원치료를 받다 숨졌다.

18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일 광주 북구 본촌동 해태제과 공장에서 전기 공사를 하기 위해 공장 지붕 위에 올라간 전모(40)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조사결과, 전씨는 전력선로 교체를 위해 공장 지붕 위 플라스틱 재질 채광창을 밟고 이동하던 중 채광창이 깨지면서 3m 아래로 추락했다.

전씨는 이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두 달여 간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16일 오후 6시 15분께 숨졌다.

경찰은 공사 관련 책임자를 소환해 안전관리 소홀 등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손석희 대표 의혹' 수사 속도 경찰 "필요시 관련자 모두 조사"

지난 주말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19시간 넘게 조사한 경찰이 제출된 증거를 분석하는 동시에 관련자를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하기로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18일 "손 대표와 프리랜서 기자 김모(49)씨 등 당사자 외에도 수사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손 대표가 프리랜서 기자 김씨에게 JTBC 채용 협박을 당한 것인지, 먼저 일자리를 제안한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분석을 마치는 대로 JTBC 관계자를 참고인 조사해 손 대표가 실제로 김씨의 채용을 추진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김씨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주점의 방에는 CCTV가 없어 사실 확인을 위해 김씨와 손 대표의 대질신문이 이뤄질 지도 관심이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중 김씨를 폭행 사건의 고소인, 협박 고소 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멸종 위기 브라이드 고래 여수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

여수 앞바다에서 10m 길이 고래 한 마리가 그물 줄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여수해경은 "지난 17일 오후 3시 20분께 여수시 삼산면 광도 남동쪽 11㎞ 해상에서 통발어선 선장 유모(47)씨가 그물 줄에 걸려 죽어 있는 고래를 발견, 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해경 조사 결과 고래는 길이 10m10㎝, 둘레 4m40㎝ 크기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서는 국제적 멸종 위기로 분류된 브라이드 고래로 판별했다.

이 고래는 최대 몸길이 14m에 이르며 주로 북태평양과 서태평양에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4년 7월 동해에서 1마리가 관찰된 적이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고래 외관에서 작살 흔적 등 고의로 포획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유통·판매가 금지돼 있어 고흥군에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조합원에 340만원 돌린 단위농협 조합장 구속

다음달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광주의 모 단위농협 조합장이 구속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광주 남구 모 단위농협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아내 등과 함께 조합원 5명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현금 34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에게 돈을 받은 조합원 중 일부가 선관위에 자진신고를 했고, 광주시 선관위는 지난 7일 이들 부부와 측근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5일 오전 A씨 부부를 체포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상관들 성기보형 수술비까지 대납시킨 공무원 징역형

쌍나팔

○…한 자치단체 공무원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향응을 받고, 상관들의 성기보형물 수술비까지 대납토록 했다가 징역형.

○…18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재우 부장판사)에 따르면 부정처사후수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71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는 것.

○…지난 2013년 울산의 한 자치단체에서 건물신축·보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당시 시공자격이 없는 건설업자 B(57)씨가 하도급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대가로 현금 700만원과 유흥업소 접대를 비롯한 상관 2명의 성기보형물 수술비로 80여만원까지 대납토록 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8타경 13491	1	나주시 남평읍 세남로1546-13, 101동 5층 504호 [팔마코이스] 84.8462㎡	아파트	95,000,000 95,000,000	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관리비2018.8분부터미납됨
2018타경 16728	1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5길19, 4층 402호 [현황4층502호] [영진아파트] 78.57㎡	아파트	69,000,000 69,000,000	공부상4층402호이나현황4층502호임
2018타경 70470	1	북구 매곡로64, 102동 4층 402호 [매곡동,호반아파트] 59.95㎡	아파트	109,000,000 109,000,000	
[대지/임야/전답]					
2018타경 15275	1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 974-5 331㎡[김길현지분13분의2전부.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대	3,258,880 3,258,880	지분매각.제시외건물매각제외
	2	화순군 능주면 원지리 235-1 155㎡[장미6분의1지분전부]	답	1,474,760 1,474,760	일괄매각.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현황도로임
		동소 236-2 43㎡[장미6분의1지분전부]	답		
		동소 243-1 118㎡[장미6분의1지분전부]	답		
2018타경 16261	1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251 331㎡[제시외건물매각제외]	대	4,071,300 4,071,300	수목[감나무5주]은포함매각
[자동차,중기]					
2018타경 16841	1	사용본거지:전남 나주시 산포면 마성2길 28-17 [매성리] 등록번호:32무3172 차명:모하비 연식:2013	자동차	18,000,000 18,000,000	보관장소:광주광산구산정동156현대주차장
[기타]					
2017타경 21150	1	광산구 안청동 739-7 2316.8㎡	공장용지	1,153,732,900 1,153,732,900	일괄매각.공장저당법제6조기계기구CNC연삭기2점은소재불명,매각제외
		광산구 하남산단9번로 140 [안청동,가동] 486㎡ 부속건물 사무소133.1㎡ 창고347.3㎡ 화장실9㎡	공장		
		동소 140 [안청동,나동] 486㎡[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목록참조[소재불명]]	공장		
2018타경 15732	1	북구 금곡동 275-9 308㎡	도로	58,712,000 58,712,000	일괄매각.화단,조경수목,입간판,교통시설물,시내버스정류장제외
		동소 275-10 20㎡[현황도로]	답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9. 3. 5. [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9. 3. 12. [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를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서 전자통신매체나 비치된 출력물로 열람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9. 2. 19.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원태